"우리에게 조직을 달라, 그러면 혁명을 만들어 주겠다!" 던 러시아 혁명당시 노동자, 농민들의 자신을 지도해 낼수 있는 '조직'에 대한 절절한 목마름의 절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현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민중들의 유일무이한 생존권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껏 치솟을대로 치솟은 물가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한술 더떠 '공공요금 인상이다', '지방자치제 선거다' 하면서 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불만에 되려 부채질을 하고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중들의 자주적 단체들의 '90년도 하반기 사업평가와 '91년도 정책기조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정세전망을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특집 제 민주 단체의 '90년 하반기 평가와 '91년 정책 기조 해설

초 읽기 접어든 민중 對 6공과의 한판 승부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타 업종별 노조와 공동임투 추진계획 대기업 노조 결합, 조직 확대 전망 진영과의 연대투쟁 미흡해

87년 7, 8월 투쟁이후 3년여에 걸친 이 땅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은 90년 1월22일 전노협을 건설함으로써 최대의 조직적 성과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전노협의 조직력은 창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해서 90년 내내 가해진 정권과 독점재벌의 탄압에 의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90년 상반기 투쟁을 거치면서 전노협은 연인원 30여 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6.25이후 최대의 전국 총파업을 성사 시켰다. 이는 전노협의 와해, 무력화를 목적으로 가해진 탄압으로부터 전노협을 사수해 내는데 있어서, 그리고 조합원들의 정치의식 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노협은 조직력의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물론 전노협의 지도내용상의 오류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전노협이 갖고 있는 힘에 비해 몇십배 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탄압을 가해 온 정권과 독점재벌에 대한 역관계상의 절대적인 열세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90년 하반기 전노협의 사업은 상반기 투쟁을 거치면서 침체되거나 이완된 조직력을 복구하는데에 일차적인 고민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단체협약 갱신 투쟁 및 노동악법등 제반 반민주악법에 대한 철폐투쟁, 인사경영권, 공휴일 축소 기도등 그침없이 가해진 탄압에 대한 저지투쟁과 물가 및 전, 월세값의 폭등으로 피폐해진 기층 민중들의 생활상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민중연대 투쟁등이 주요한 과제로 부여되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90년 7, 8월 들어 대거 민주화되기 시작한 대기업 노조와의 공동실천의 강화를 통해 전노협에 가입을 위한 실천적 토대를 형성하고 독자적 발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업종별 노동조합 연맹(협)회의' (이하 업종회의)와의 상호 교류의 강화를 통한 통일의 가능성을 높여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11월11일 전태일 열사의 20주기를 맞이하여 거행된 '전국 노동자 대회'는 전노협 하반기 사업의 총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11월10일의 전야제를 포함하면 1박2일에 걸쳐 진행된 대회는 정권의 원천봉쇄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8천여명의 노동자,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시종일관 뜨거운 열기속에서 진행 되었다. 특히 대회는 전노협과 업종회의가 공동주최하고 민주화된 대기업 노조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으로 해서 커다란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노동조합 운동의 통일의 전망을 보다 더 높이는 것이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회가 지향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특히 해산과정에서 보여졌던 무질서함은 충분한 비판의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작게는 대회장에서 사노맹을 지지하는 학생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마찰도 문제제기가 되었다.

그러나 민중진영과의 연대투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참여가 지극히 저조하였다. 참여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11월25일 민중대회에 참여한 노동자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11월11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 사업을 집중한 결과 다소 준비가 미흡했었던 데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여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해내지 못한 전노협의 불찰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노협의 91년 사업은 이러한 평가, 반성의 토대위에서 진행될 것이다.

전노협의 91년 사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90년 하반기 사업을 통하여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완되어 있는 조직력을 정비하고 91년 임금인상 투쟁 및 노조 탄압 저지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이는 전노협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으로서의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91년에는 급격한 통화팽창으로 인한 물가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음으로해서 국민대중의 생활상의 위기를 격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언젠가 한번은 터질래야 터질수 밖에 없는 내각제 개헌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통일 문제 또한 주요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전노협은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올바른 입장을 제출하고 민중연대투쟁에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이러한 투쟁의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투쟁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제반의 사안에 대한 선전, 선동의 강화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 회의"로 결집되고 있는 주요 대기업 노조와의 공동실천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전노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며, 업종회의의 경우 당분간은 독자적인 발전이 불가피한 조건속에서나마 매시기 정권과 독점재벌에 의한 탄압에 공동대처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동임투를 추진함으로서 통일에의 전망을 높일 것이다.

90년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탄압의 저곡이 경제위기설을 이유로한 이데올로기 공세였다면, 91년 탄압의 전주곡은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악 기도와 91년 임투를 주도할 것이 예상되는 지하철, 대우조선, 풍산금속등 주요 대기업 노조에 대한 사전 무력화 작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총력대응함으로써 탄압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면 91년 임투에서의 승리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90년의 쓰라린 경험은 전노협을 보다 더 살찌웠으며, 탄압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잘만 한다면 오히려 91년 임투를 보다 더 활기있게 수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병 학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한 UR저지 투쟁 자주적 농촌경제 건설에 주력할 터

I. 90년도의 농촌현실

90년도는 농업을 해체하고 농민을 농촌에서 추방하는 농업포기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이미 70년대 말부터 물가안정을 핑계로 시작된 외국농산물의 수입확대와 80년대 중반부터의 시장개방은 국내외독점자본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코자하는 정책이었다. 즉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며, 수입개방은 농업에는 불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는 독점자본의 주장속에서 이미 자본축적을 무제한으로 추구하는 반대편에 농업의 필연적인 괴멸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90년 3월 여야 만장일치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 관련한 법규들을 제정하고 식품을 외국에서 사다먹을 것을 전제로한 대농중심의 자본가적 구조개편을 선언하고 나섰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전면적인 시장개방뿐 아니라 국내 농업정책의 축소철폐, 수입농산물의 검열기준완화까지 요구하는 내용으로 잡혀가 그 제서야 이러한 사실들을 국내에 알리고 수입개방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에따라 정부는 덜 심고 덜 생산하기를 강제하는 감식 감산정책, 복숭아 포도농사 포기종용, 암소 암퇘지 도축권장, 하는등의 농사포기를 강요하고, 물가인상의 책임을 농산물에 돌리는 파렴치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을들어서는 증산정책기조의 식량수매제도의 축소, 미사회의 쇠고기 수입관련 농업생산기반의 파괴 및 해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II. 90 년도 농민투쟁과 그 평가

90년 4월24일 그동안 여러갈래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활동하여왔던 농민조직이 전국단일조직으로 통일되었다. 전농은 이제 농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일반 농민 대중을 급격히 조직하는 한편 현재의 농업의 전반적 위기를 분쇄키 위한 전면적 항전을 조직해야하는 임무를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반기에는 주로 조직의 통일성과 지도성을 강화하는 조직정비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하반기 들어 농민대중과 함께 농발대를 분쇄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저지하며 농산물 제값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지난 9월7일 1차 농민대회는 전남 전북뿐 아니라 농민운동역량이 약한 경기도와 제주도에서도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3만5천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경찰은 백골단과 최루탄으로 행사자체를 원천봉쇄하였을뿐 아니라 충북제천에서는 열차까지 정지시키고 농민들을 끌어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마을까지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 집회와 관련하여 4천여명의 농민을 사전연행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돌파한 농민투쟁은 현시기 민중운동의 횃불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많은 운동의 간부들이 수배되거나 구속되는속에서 전농은 이에 맞서 끝가지 싸울것임을 결의하고 9.22 제2차 농민대회를 선포 하였다.

제2차 농민대회는 전국 45개 군에서 7천여농민이 참여한 군농민대회였다. 이것은 농민운동을 압살하려는 현 정권에 대한 크나큰 타격이 되었으며 특히 농번기임에도 떨쳐일어서므로서 농민들에게는 대단한 자신감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두차례의 투쟁을 발판으로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범국민공동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9월28일 힘차게 결성될수 있었던 것이다. 공대위에는 농민단체 뿐 아니라 사회운동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종교단체등 총 35개 조직이 참여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거부코자하는 전국민적 연대투쟁의 대오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명운동, 국민대회등이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나 농민이나 일부단체외에 많은 조직들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자기 직업이나 계급 계층과의 연관에 대한 이해가 얕은 상태에서 자기 대중과의 힘있는 투쟁을 조직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지역 공대위가 충북, 전북, 전남 등지에서 계속 건설되고, 국민적 이해가 깊어가는 속에서 전면적인 수입저지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 11월 쌀 수매가 본격화되면서 12월에 3차 농민대회가 64개 군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부락에서부터 이장까지 나서서 수매거부를 결의하고 이장단 회의에서 집단적으로 이장직 사표를 결의함으로써, 마을과 면단위를 수매투쟁의 기지로 만들어나갔던 것이다. 수매장을 점거하고 벼에 불을 지르는 투쟁은 이장단의 사표결의와 함께 농업위기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강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민들의 추수대동제마저 원천봉쇄함으로써 분노한 농민들이 군청을 점거하고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투쟁에 떨쳐일어서도록 하였던 것이다. 지난 11월25일의 민중대회 참가, 12월3일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거부 농협농성, 12월4일의 쌀값보장 전량수매쟁취 국회농성등을 계속해서 펼쳤다. 이제 농민투쟁에는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농민과 일반국민까지 참여하는 범국민 공감대와 투쟁대오가 구축되어 폭발적인 국민투쟁으로 발전해 갈 것이 확실하다.

III. 91년 전망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EC측의 수출보조금 삭감거부로 결렬되어 91년 1~2월로 협상시한이 연기되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97년도 완전수입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UR협상 타결과 상관없이 농업을 포기하면서 국내에서만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짓약속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제 90년도에 형성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을 지켜야 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하여 수입을 저지하고 농업을 회생시키고자하는 국민투쟁을 조직해야한다. 또한 농민들은 농산물값의 보장을 요구하면서도 생산비인하투쟁을 본격적으로 펼침으로써 범국민적 투쟁을 지속시킬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소작료 인하투쟁, 소작철폐투쟁, 농자제값인하투쟁은 곧바로 전체국민의 이익임을 선전하고 농업에서의 농민주체를 세워냄으로써 농업발전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정 찬
〈전국농민회연합회 대변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육장악음모에 즉자적 대처에 그쳐 권력재편기 대비한 자체역량강화 중점

I. 90년 사업평가

90년 상반기 '참교육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대회'에 이은 5·27 1주년 전국교사대회, 그리고 5~6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원상복직서명투쟁은 전교조를 잊고 싶어하는 지배권력과 교육관료들에게 전교조의 건재함을 과시한 쾌거였었다.

상반기 사업을 계승하며 현장일상활동강화와 교육여건·근무여건 개선투쟁을 주요한 목표로 내건 전교조는 11월교육재정확보투쟁과 12월 이후 민주적 인사위 설치투쟁으로 힘차게 진군하고 있다. 또한 10월 이후 임용고시제 철폐 및 종합대책안 철회를 위한 예비교사와 미발령교사부분과 실천적으로 결합하면서, 11월 18일 교육주체 결의대회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90년을 총괄적으로 볼 때, 그 성과적 측면으로서는 먼저 현장대중이 전교조 활동의 주체로 성장·진출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대중적 승리의 사례와 경험이 축적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사립부문, 교과·학사·여성 등 급별 전문조직의 대중사업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귀중한 성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부족한 측면으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전교조지지 대중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후원인 증가가 사업의 양에 비해서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전문역량이 아직은 미흡하여 교육사안에 대한 대안제시가 빈약하여 즉자적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과 일상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대중투쟁동력을 복원시켜 내야 할 것이다.

II. 91년 교육정세와 투쟁방

1) 91년 교육부문의 정세

90년 7월 임시국회에서 안정적인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하여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을 무릅쓰고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군과 언론에 대한 장악의도를 노골화한 바 있는 현 정권은 이제 교육부문에 대해서도 그 장악음모를 91년에는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권이 교육을 장악하기위한 첫번째 프로그램은 전교조에 대한 지속적인 봉쇄조치와 더불어 교원임용고시제 강행, 발령시 보안심사제 강화, 사범대·교육대생의 선발, 양성, 임용에 관한 종합대책안의 관철 등 예비교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고교입시부활기도, 고등학생 선도징계규정 강화, 교복부활 유도, 월반·유급제 도입, 학생자치활동탄압 등 전교조 결성 및 사수투쟁 과정에서 새롭게 솟아오르는 중고등학생부문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입시경쟁체제의 강화다.

그리고 한국교총(옛 대한교련)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개량화 술책을 시도할 것이나, 여전한 교육재정의 빈곤구조로 말미암아 교육환경과 근무여건은 거의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2) 교육주체 역량강화 및 단결투쟁

최근 문교당국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기화로 새생활·새질서 캠페인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강제 동원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하는 등 교사, 학생, 교수, 예비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교유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부문 뿐만 아니라 전교육주체들이 결집된 힘으로 역시 총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당위로서 다가오게 된다.

즉 91년에는 교육전선의 내용이 보다 다양화되고 풍부해지며, 투쟁이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91년 교육주체 단결투쟁의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교육자치제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이 확대된 정치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수렴해내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대중의 전교조에 대한 지지도를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91년 투쟁과제

89년 상반기는 전교조 결성투쟁기, 하반기는 조직복원기였다면 90년은 현장의 투쟁력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91년은, 89년 이래 새롭게 조직화되고 있는 학부모부분과 90년 하반기 괄목할 진출을 해낸 사대생, 교대생, 미발령교사부분 등을 묶어세워, 전교조와 권력과의 대치전선을 교육주체와 권력과의 대치전선으로 확대발전시켜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제도, 입시문제, 교육재정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참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교조는 교육정책 대안세력으로서 학교와 사회에 우뚝서게 될 것이다.

또한 역동적으로 전개될 91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 정권의 장기집권과 분단고착화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교육독점분쇄투쟁과 통일교육쟁취투쟁을 벌이면서 민중부문과 연대투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92 '93년'의 총선과 대통령선거시기 즉, 권력교체기에 기필코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전교조 합법성쟁취와 해고자 원상복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철 국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정책실장

근절되어야 할 교육통제 정책

지상심포지움…한국사회에서의 대학의 현실과 전망

본고는 지난 12월7일 전국대학 민주동문회 대표자협의회 주최로 열렸던 제 1회 학술 심포지움에 대한 취재기이다. 대학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심포지움은 향후 대학을 자율화, 자주화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서적 성격을 띄게 되리라 본다 〈편집자 註〉

양적팽창에만 급급한 교육행정 시정해야

지난 10월에 결성된 전국 45개 대학 민주동문회 대표로 구성된 전국대학민주동문회 대표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한 많은 분석과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거의 없었음을 반성하며 창립후 첫번째 사업으로 대학발전으로 모색하는 진지한 노력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김광식 교수(성공회 신학회 강사, 정치학)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움에서는 한상범 교수(동국대, 법학)의 '정치권력과 대학통제', 강순원 교수(한신대·교육학)의 '현행 대학교과과정의 성격과 그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비롯해 김일수 교수(고려대·법학), 김홍명 교수(조선대·정치학), 최종욱 교수(국민대·철학), 조희연 교수(성공회 신학대·사회학), 김환성(한양대 대학원 총학생회 학술부장), 김장규(본교 총학생회 교십위 위원·신방과 88학번)군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한상범 교수의 정치권력과 대학 통제라는 주제발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자유의 특수성과 한계성을 통해본 문제제기를 하면서 독일사회의 대학과 영미 서구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들면서 지금의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에 대해 '한국 나름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서방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정된 대학상을 기준으로해서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헌법에서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조항으로 하여 대학의 자유와 가치를 설명한다. 특히 헌법의 해설에서는 서방 선진 자본주의 나라의 사례와 이론, 학설을 들어서 설명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우리의 특수사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론으로 그치게 된다. 그래서 대학강단의 대학론은 이상론으로 그치고 현실의 대학의 실체는 가장 이상적이지 못한 실체를 보여 주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점에서 우리는 대학에 대한 권력의 규제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사회의 보수이 응집, 집약되어 있는 대학의 실상, 문교행정과 대학통제, 공안기관의 대학에 대한 사찰, 교육관계단체를 통한 공식적·비공식적 통제의 사례들을 열거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그간에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이루어낸 결과를 수습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대학관계자들은 누구나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의 상태대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질적으로 세계에서 최하위로 떨어지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렇게되면 한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상층부 부유층의 자제들은 고등학교부터 외국에 유학을 가게되고 이 나라는 완전히 문화적 식민지가 되고 그 후에 가는길은 뻔하게 된다. 이미 지금도 외국서 대학진학 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3만명이라고 한다. 대학관리를 통해서 치부한자들의 자제들은 질이 낮은 한국대학이 아니라 외국대학에 수학시켜서 그럴듯한 간판을 달고 행세하게 되고 국내의 대학은 그러한 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쪼그라들고, 그 대학을 나온 졸업생은 초라한 꼴로 자기 졸업장을 부끄러워 하면서 열등인생으로 외국대학의 간판을 얻어 단 자들과 살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등록금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학생등록금이외에 대폭적 지원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전처럼 학생이 명문대학의 졸업장에 만족하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살고자하면 국제경쟁사회에서 자멸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변천을 정권당국이나 대학관계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대학을 사유물시하여 복주머니식으로 움켜쥐고 있으려는 망상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하며 정권당국자들은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지 않고는 대학인이 지지나 동의를 결코 얻어낼 수 없으며 적대적 관계로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민주화를 거역하고자 하는 대학통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학당사자나 대학인 스스로가 자각해야 할 문제이다.

대학문제의 해결은 우리사회 문제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강순원 교수의 한국교육과정의 성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의 요지는 먼저 '한국대학은 현재 대중화 추세에 있다'고 보면서 7가지로 요약정리를 하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을 규정하고 권력의 대학통제, 대학운영상의 문제, 미국 학제인 기여입학제 도입에 따른 문제, UR협상에 따른 외국 분교의 설립에 따른 문제 그리고 교육내용을 둘러싼 교수, 학생간의 건강한 학문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법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대학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방현기 記者〉